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2016.4.28 | 정승일_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소장, 새사연 회원 | sijeong11@naver.com

모든 소득 유형에서 가장 부유한 1%와 그 다음의 2% 사이에 상당한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나라 경제에 하나의 특권적인 1%의 소득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넉넉하게 사는 상위 10% 내에서도 가장 잘사는 1%의 갑부들과 그렇지 못한 9% 사이에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격차와 장벽이 존재한다.

한국은 G9 강국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현재 3만 달러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에 속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인데, 여기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7개국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종합적인 경제력은 세계 7위권이다. 한국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7위이며 더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R&D) 투자액의 비율은 4.3%(2014년)로 세계 1위이다. 연구개발(과학기술) 투자의 절대액수 역시 세계 6위로, 이탈리아를 앞선다.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은 3.4%로 세계 1위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은 이미 글로벌 선진업체의 그것과 비등해졌거나 어떤 영역에서는 더 앞서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9위권이다. 세계 106개국의 무기와 병력, 국방비 등을 평가하는 웹사이트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을 세계 9위로 평가했다. 현대 군사력의 핵심인 국방과학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9위이며 이것은 이탈리아의 10위보다 앞선 것이다. 즉 군사과학기술 면에서도 한국은 -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을 제외할 때 - 서방 G7에 속하는 강국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6년에 이어 2012년에 한국의 종합 국력을 세계 9위로 평가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이제 G9 또는 조만간 G7이라 불려도 될 만한



강국이다.

한국경제가 봉건적, 전근대적 자본주의?

그렇지만 한국경제를 전근대적인 자본주의로 보는 견해가 야권과 진보에 만연하고 있다. 예컨대 롯데그룹의 경영권 향방을 놓고 창업자와 두 아들, 그리고 친족들 간에 벌어지는 진흥탕 싸움과 그리고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재벌들의 못된 행동을 비판한다. 그리고 많은 야권 인사들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중세 유럽의 봉건영주처럼 군림하면서 형제들 간에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다고 싸잡아 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한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한국경제에서는 자본주의가 아직 덜 발전되었고 자본주의적 발전의 초기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경제에서 빈부격차와 함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도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재벌체제 때문이며 재벌체제란 곧 전근대적 중상주의 체제의 일부라고 지적한다. 즉 한국경제는 여전히 과거 군부 대통령 30년간에 걸친 중상주의(mercantilism)가 지배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근대적 자본주의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장하성 교수가 작년 11월에 발간한 『왜 분노해야 하는가』와 그리고 2014년 8월에 발간한 『한국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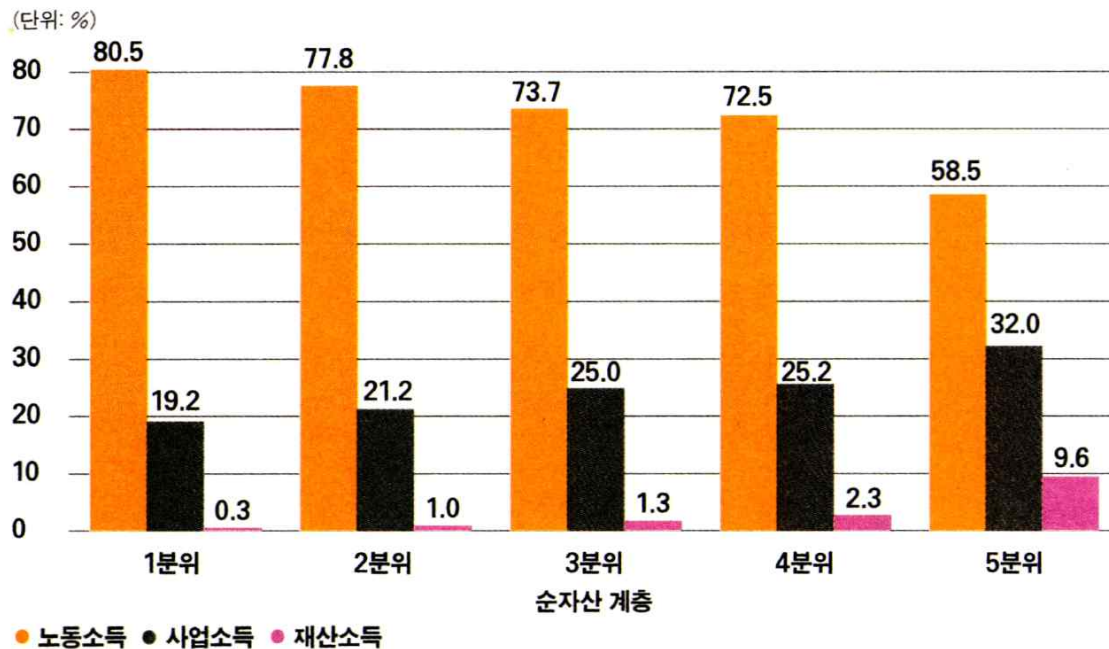
한국은 ‘돈이 돈을 버는 경제’가 아니며 따라서 아직 미성숙한 자본주의이다?

한국경제에서 아직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한국은 아직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경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직결된다. 정의상 자본주의란 ‘돈이 돈을 버는’ 경제이다. 그런데 아직 돈이 돈을 버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한국 경제는 따라서 아직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의 초기일뿐이다. 장하성 교수는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재산과 소득의 관계를 보면 자본 축적의 초기에는 소득이 재산을 형성시키고 자본 축적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재산이 다시 소득과 재산을 높이는 인과관계를 갖는다. 논의를 과감하게 단순화시킨다면, 한국의 상황은 재산이 다시 소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재산을 이루는 자본축적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장하성 교수도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재산이 많고 재산소득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의 재산소득이 총 가계소득의 불과 0.7%일 뿐이며, 근로소득이 95%를 넘어 압도적이다’라는 증거를 제시 하면서, ‘따라서 한국경제는 아직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과감한 단순화를 서슴지 않는다.

그림 1. 순자산 계층별 소득별 구성 비율



출처 :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254쪽.

재테크 자본주의가 바로 ‘돈이 돈 버는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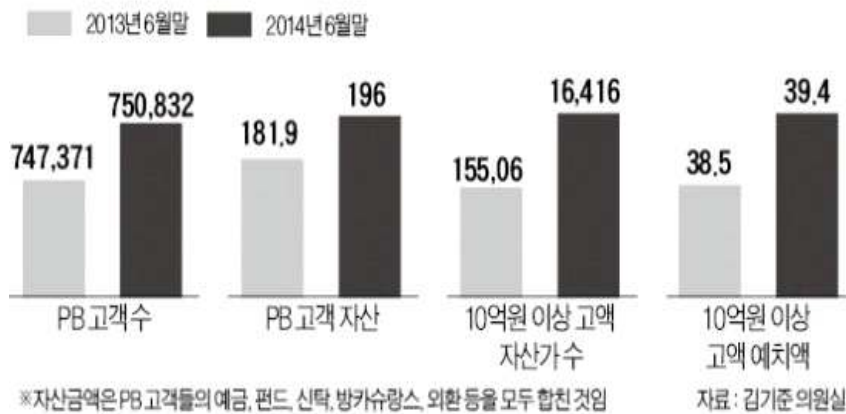
물론 그가 제시하는 통계 자료는 그 자체로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사실 빈익빈부익부의 현실의 한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먼저 우리 주변의 일상을 보자. 가령 영화배우 정지훈과 고소영 같은 이들이 영화의 성공으로 대박을 터뜨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빌딩을 구입하는 일이다.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잘만 하면 건물가 상승으로 양도소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은 재산소득이며 불로소득(비근로소득)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째 논란되어 온 것이 부동산 투기이고 그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이었다.



그런데 어디 부동산 투기뿐인가? 1998년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재테크 자본주의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연하게 미국 자본주의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모델로서 간주했고 월스트리트 수준의 금융시장을 한국경제에 이식하고자 애썼다. 불로소득(재산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재테크 자본주의이다. 월스트리트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바로 금융자산가들이 지배하는 경제 즉 산업자본=생산자본에 비해 금융자산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본래 정신은 ‘돈이 돈을 낳는,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자본주의이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금융자산 및 부동산 투자이다. 1998년 이후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재테크가 만연하고 “부자 되세요”가 인사말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돈을 버는 시대’ 즉 ‘금융자산 헤게모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2. 국내은행권 전체 PB 고객 및 자산 현황 (단위 : 명,조원)



출처 : 김기준 의원실

프라이빗뱅킹의 성장

‘재산소득 즉 자산소득이 미미하므로 한꾸은 자본주의의 초기’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현실에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운용을 대행해주는 다양한 자산운영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있다. 먼저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면서 운용수수료를 얻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업이 급성장했다. 시중은행들은 VIP고객들을 고객으로 프라이빗뱅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 10억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액자산가들의 숫자는 2014년 기준 1만6천4백여 명이며 예치총액은 40조원이다. 1인당 평균 24억이다. 연수익율을 2%로 낮게 잡더라도 고액자산가 1인당 매년 4천8백만원의 재산소득을 얻을 수 있는 예치액이다. 게다가 고객들의 기대수익율인 연 4~6%를 가정할 경우 1인당 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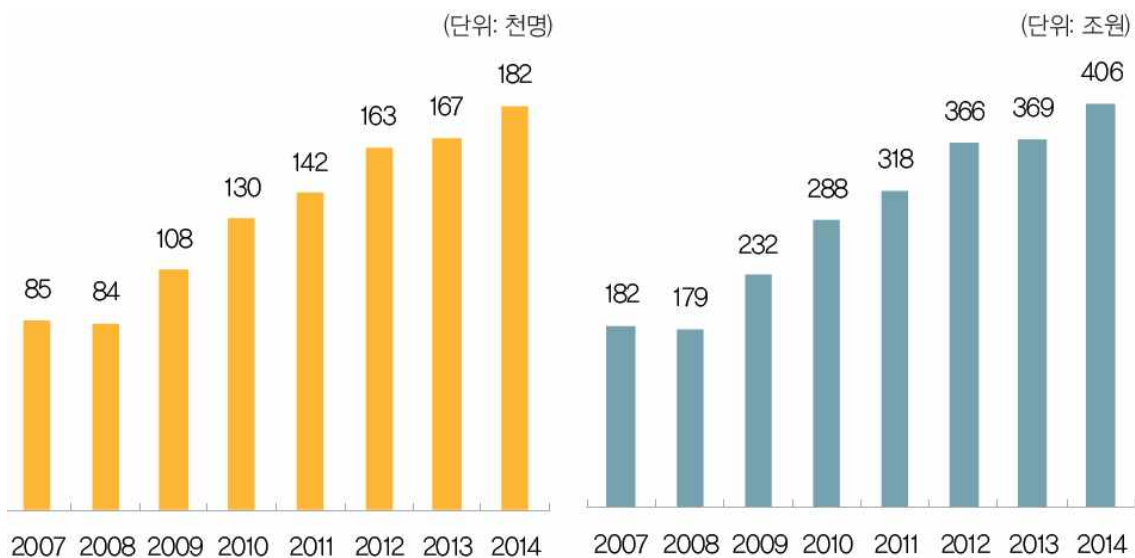
억~1억5천만 원 가량의 재산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액수이다.

김기준 의원실 자료(2014년)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프라이빗뱅킹 고객 총수는 75만 832명인데 은행들은 통상 3억 이상을 예치한 고객들을 프라이빗뱅킹 고객으로 분류하여 서비스해준다. 이들이 은행에 운용을 위탁한 금융자산은 2013년 181조9105억 원에서 2014년 195조952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2014년에 얻은 연간 자산소득(재산소득) 총액은 적어도 4조원(수익율 2%), 많게는 8~12조원(수익율 4~6%)이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백만장자 재산가들의 나라

그런데 부유한 재산가 중에는 아직 PB 고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국민은행 경영연구소가 잠재적 PB 고객을 조사하여 매년 발간하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한국의 부자는 18만2천 명이다. 여기서 부자란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10억이 넘는 자산가들을 말한다. 금융자산에는 예금과 적금, 주식, 채권, 외환 등 모든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그림 3. 한국 부자들의 숫자와 금융자산



출처 : 『한국 부자보고서, 2015』,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더구나 세계적으로 한국은 금융자산 1백만 달러(최근 환율로 10~12억원)를 보유한 이른바 백만장자(millionaire)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이다.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구조개혁(시장개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치하에서 진행되던 2002~2005년 사이에 금융자산 1백만 달러 이상 백만장자의 숫자가 연평균 19.4% 증가한 것이다. 메릴린치가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 연례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금융자산 1백만 달러 이상 백만장자의 숫자는 2002년 5만5천명에서 3년 뒤인 2005년에 8만7천명으로 급증했다. 국민은행 발행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4년 기간 중에 연평균 13.7%씩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백만장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컨설팅회사인 캡제미니와 RBC자산운용이 2014년 6월에 발표한 『2014년 세계 부(富)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한국에서 백만장자는 2012년 16만 명에서 2013년 17만6000명으로 10.3% 증가했다. 집과 자동차(내구 소비재)를 제외하고 금융자산 1백만 달러 이상 소유자를 파악한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부자 숫자는 국민은행 발행 『한국의 부자 보고서』와 거의 같다.

그림 4. 국가별 백만장자 수 순위

| 국가별 백만장자 수 순위 (단위: 천명) | | |
|------------------------|------|--------------|
| 1 | 미국 | 4006 (16.6%) |
| 2 | 일본 | 2327 (22.3%) |
| 3 | 독일 | 1130 (11.4%) |
| 4 | 중국 | 758 (17.8%) |
| 5 | 영국 | 527 (13.4%) |
| 6 | 프랑스 | 472 (9.7%) |
| 7 | 스위스 | 330 (16.8%) |
| 8 | 캐나다 | 320 (7.2%) |
| 9 | 호주 | 219 (5.8%) |
| 10 | 이탈리아 | 203 (15.6%) |
| 11 | 한국 | 176 (10.3%) |

*2013년 기준. ()는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 캡제미니, RBC자산운용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세계 10위의 재산가 나라이며 2013년에 이미 세계 10위인 이탈리아에 이어 11위로 올라섰다. 그런데 나라별 백만장자 숫자를 비교한 위의 표를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3050의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그리고 한국의 7개국뿐이다. 즉 한국은 재산가=자산가 숫자의 측면에서도 G7에 속하는 선진 강국이다.



1% 부자들의 재산 구성 - 금융자산과 부동산

국민은행 발행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8만2천명의 고액 자산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부동산 제외)은 약 406조이며 따라서 1인당 평균 22억3천만 원이다. 이는 5천2백만 국민 중 0.35%에 불과한 18만2천명이 국민 전체 가계 보유 금융자산의 14.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8만2천명의 부자들이 1인당 5명의 가족구성원을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5천2백만 전인구의 1.75%인 약 90만 명(2016년 약 1백만 명)이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백만장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재산가들은 평균적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 등 비금융자산 역시 10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금융자산 대비 비금융자산 비율은 평균 52.4 대 47.6이다. 즉 한국에서 부자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부동산(자기집 포함)과 금융자산 각각 10억으로 합계 20억 가량의 재산을 가져야 한다.

그림 5.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 구성과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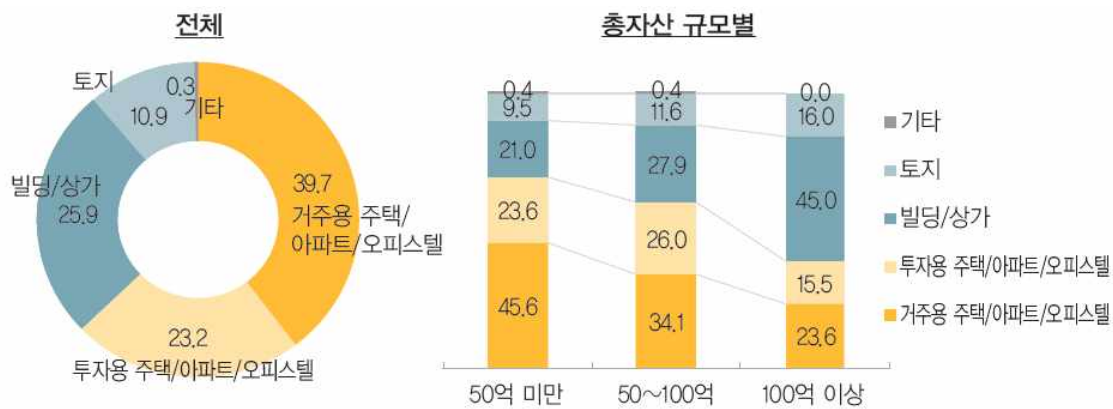
출처 : 『한국 부자 보고서, 2015』,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물론 이 수치는 최소값이다. 『한국 부자보고서, 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8만 2천명(2015년 기준 약 20만명)의 부자들은 1인당 평균 22억3천만 원의 금융자산과 18억3천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의 절반인 9억은 자기 집이고 다른 9억은 상가와 빌딩, 오피스텔, 임대용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리고 1% 부자들의 재산(부)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은 해마다 줄고 반면에 금융자산 비중은 늘고 있다. 이는 자산가들의 금융자산 투자를 늘려서 한국의 금융산업을 미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고자 애써온 역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2014년 평균 수익률은 2.99%이며 따라서 연 6천7백만원의 금융수익(재산소득)을 얻는다. 게다가 이들이 보유한 수익형 부동산의 연 수익률을 3~4%로 가정할 때 9억의 수익형 부동산으로부터 연 2천7백만~3천6백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 이 둘을 합칠 경우 연 9천만원~1억이다. 기타자산(1인당 약 1억9천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소득 약 5백만 원까지 합칠 경우 부자들은 1인당 연 9천5백만원~1억1천만 원의 자산소득(재산소득)을 얻는다. 실제 『2015 한국의 부자 보고서』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백만장자 부자들의 연평균 재산소득은 1억이다.

그림 6.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및 규모



자료 : 『한국 부자 보고서, 2015』,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1% 부자들의 재산소득

장하성 교수는 ‘가장 부유한 소득 상위 10%의 경우 재산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의 3%로 미미하고 근로소득이 95%에 달해 압도적이다’라고 말한다. 틀린 통계는 아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득상위 10%(전인구의 10%)에 대해서만 말하는가? 왜 1%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가?

『한국 부자보고서 2015』에 따르면 전인구의 1.5% 가량인 고액자산가 가족들에게서 재산소득은 근로소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2013년 가계소득 3억1천만원(중앙값 2억원)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평균 35.5%에 달하며 또한 재산 1백억 이상에서는 재산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의 49.3%로 거의 절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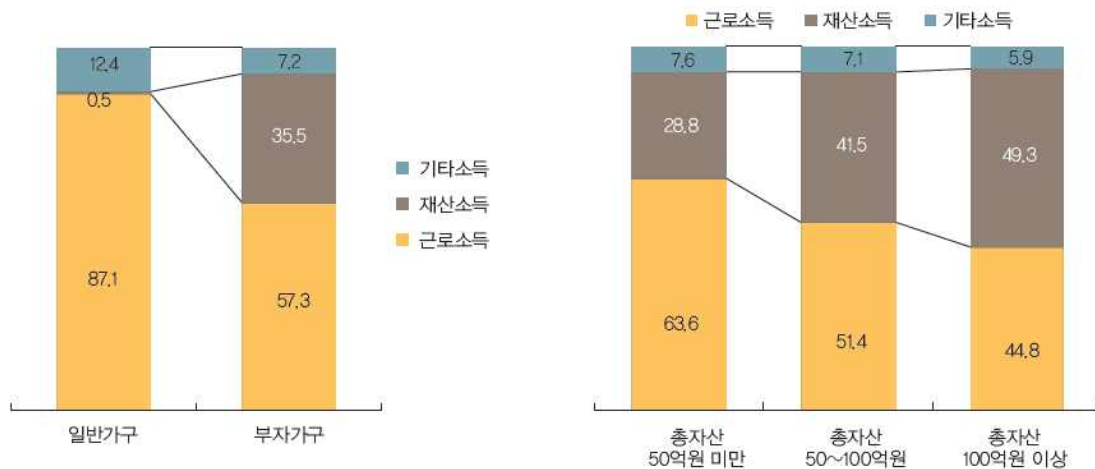
2014년 이들의 평균 가계소득은 2억9천만 원(중앙값 2억)인데 그 중 근로소득이 1억6천만원이고 재산소득이 1억 원이며 기타소득이 2천만 원이다. 연 1억의 재산소득은 한



국 부자들이 현업에서 은퇴하여 근로소득이 사라진 이후에도 자신들이 바라는 넉넉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 부자 보고서』는 “결국 한국 부자에게 있어 노후 준비란 현재 보유 중인 자산 가치의 성장 및 관리를 통해 어떻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또한 주목할 점은 백만장자 부자들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1억6천만 원이라는 점이다. 이 역시 이들이 근로소득자들 중 최상위 1%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높은 근로소득(봉급과 임금)을 버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오너 대표이사 사장과 잘 나가는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들, 그리고 대기업과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또는 공기업 등의 임원 또는 고급 간부들이 그들이다.

그림 7. 부자들의 가계소득 구성과 총자산 규모별 가계소득



출처 : 『한국 부자 보고서, 2014』,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부자 1%가 싹쓸이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가장 부유한 상위 1%가 재산소득을 싹쓸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다. 먼저 2014년 10월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자. 배당소득은 주식보유자에게 분배되는 재산소득으로 주식투자자와 펀드 투자자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소득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을 받은 국내 주식투자자는 모두 882만5천여 명 즉 전 국민의 17%이다. 그 중 주식을 많이 가진 상위 1%(8만8천명) 즉 전 국민의 0.17%가 총 배당소득 11조3천억 원 중 무려 72.1%인 8조1천7백억 원을 가져갔다(즉 최상위 1%로의 주식배당 소득 집중도는 72.1이다). 그리고 그 다음, 그 1%를 뺀 9%(79만4천명) 즉 전 국민의 1.6%에 해당하는 이들이 총 배당소득의 21.4%를 가져갔다. 결국 배당소득 상위 10%(또는 5천2백만 전 국민의 약 1.8%인 88만명)가 총 배당소득의 대부분인 93.4%를 가져간 것이다(즉 상위 10%로의 주식배당 소득집중도는 9.34). 그리고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90%에 해당하는 794만3천명(전 국민의 15.9%)에게는 겨우 나머지 배당소득 6.5%(7천3백억)가 배당되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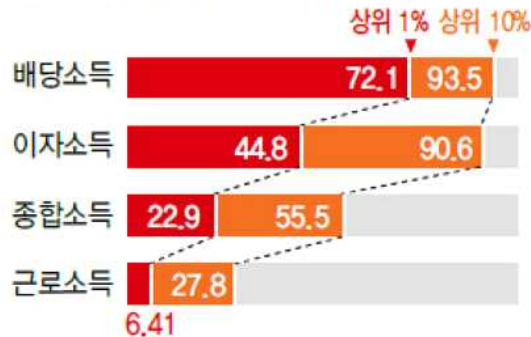
전 국민의 1.8%에 해당하는 88만 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93.4%를 가져갔다는 것은 배당소득에 관한 한, 최상위 1.8%가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52배(=93.4/1.8)의 배당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국민 중 가장 부유한 1~2%에게 재산소득의 90% 이상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자소득에서도, 조금 완화된 형태지만, 나타난다. 2012년 국세청 소득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공식적 이자소득 총액은 24조9천억 원이다. 그리고 이자소득자들 중 가장 부유한 상위 1%인 47만8천5백명(또는 전 국민의 0.9%)이 2012년 이자소득 총액의 44.8%인 11조1천4백억(1인당 평균 약 2천330만 원)을 가져갔다. 즉 최상위 1%로의 이자소득 집중도는 44.8이다. 이것은 전 국민 중 가장 부유한 최상위 0.9%가 평균적인 국민보다 50배(44.8/0.9)의 이자소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위 1% 바로 아래의 9%에 해당하는 430만명(또는 전 국민의 8.3%)의 이자소득자들은 2012년 우리나라 이자소득 총액의 45.8%인 11조4천억 원(1인당 평균 약 265만원)을 가져갔다. 상위 1%와 9%를 합친 상위 10%의 이자소득자들(또는 전 국민의 9%)가 2012년 총 이자소득의 90.6%를 가져갔고 전 국민의 나머지 91%는 겨우 9.4%를 가져간다는 것을 말한다. 10배의 차이이다.

이렇듯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대표되는 재산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중 가장 부유한 최상위 1~2% 부유층으로의 매우 집중도가 높아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재산소득의 50배에 달한다. 그만큼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더구나 여기에는 배당 및 이자소득보다 훨씬 중요한 또 다른 재산소득(자본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빠져있는데, 우리나라의 임대용 부동산(상가, 빌딩, 주택) 소유의 부자들로의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의 불평등 역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상위 1%와 상위 10% 소득점유율 (2012년 기준, 단위 : %)



자료 :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4년 10월 8일.

재산소득 불평등이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하다

재산소득의 불평등에 비한다면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그 정도가 약한 것처럼 보인다. 2012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2014년 10월 8일)를 보면, 가장 돈을 잘 버는 근로소득자 상위 1%가 총근로소득 422조4천446억 원의 6.41%인 27조787억 원을 가져갔다.¹⁾ 즉 최상위 1%는 평균적인 근로소득자보다 6.41배를 더 벌어들인다. 그리고 근로소득 상위 10%(여기에는 최상위 1%도 포함됨)는 그 27.8%인 117조4396억 원을 가져갔으므로 그 10% 상위 근로소득자들은 로의 평균적인 근로소득의 2.78배를 벌어들인다.

한편, 재산소득 불평등에 비해 근로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하다는 점은 다른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9월 국세청이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자 1,618만7천여 명(여기서는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 소득자도 포함)의 평균 연간 근로소득은 3,172만5천원(월 264만 원) 가량이다.²⁾

1) 최재성 의원실에서 2012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이 자료에서 모든 수치는 근로소득세를 납세한 근로소득자들 기준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 상위 1%, 10%, 90% 등의 숫자와 그들의 총근로소득 27조원, 117조원, 422조원 등의 숫자 역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자들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전수 조사한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1,618만7천여 명 중 740만 명(45.7%)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2) 윤호중 의원실에서 2014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 이 자료의 수치는 근로소득세를 납세하지 않은 이들(근로소득세 면제자)도 포함하여, 1,618만7천여 명의 모든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최재성 의원실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표 1. 2014년 연 근로소득 분포

| | 인원수 (명) | 분위 소득 구간 | 분위 소득 합계 (백만원) | 비중 (%) | 1인당 평균소득 (천원) |
|---------------------|------------------|--------------------|--------------------|---------------|------------------|
| 1분위 | 1,564,932 | 0~400만원 | 2,905,610 | 0.57% | 1,857 |
| 2분위 | 1,580,136 | 400~950만원 | 10,642,892 | 2.07% | 6,735 |
| 3분위 | 1,707,164 | 950~1,400만원 | 20,254,436 | 3.94% | 11,864 |
| 4분위 | 1,604,034 | 1,400~1,800만원 | 25,690,498 | 5.00% | 16,016 |
| 5분위 | 1,661,864 | 1,800~2,300만원 | 33,979,091 | 6.62% | 20,446 |
| 6분위 | 1,559,937 | 2,300~2,900만원 | 40,342,026 | 7.86% | 25,861 |
| 7분위 | 1,614,097 | 2,900~3,700만원 | 53,018,120 | 10.32% | 32,847 |
| 8분위 | 1,638,473 | 3,700~4,850만원 | 69,447,436 | 13.52% | 42,385 |
| 9분위 | 1,630,796 | 4,850~6,700만원 | 92,748,715 | 18.06% | 56,873 |
| 10분위(상위 10%) | 1,626,214 | 6,700만원 이상 | 164,518,758 | 32.04% | 101,167 |
| 상위 10-5% | 860,054 | 6,700~8,500만원 | 63,392,486 | 12.34% | 73,708 |
| 상위 5-1% | 653,138 | 8,500~1억3,500만원 | 66,123,408 | 12.88% | 101,240 |
| 상위 1% | 178,830 | 1억3500만원 이상 | 39,379,157 | 7.67% | 220,204 |
| 상위 1-0.5% | 91,228 | 1억3,500~1억7천만원 | 13,106,079 | 2.55% | 143,663 |
| 상위 0.5-0.1% | 71,612 | 1억7천~3억5천만원 | 15,678,730 | 3.05% | 218,940 |
| 상위 0.1% | 15,990 | 3억5천만원 이상 | 10,594,349 | 2.06% | 662,561 |
| 상위 0.1-0.05% | 8,418 | 3억5천만원~4억9천만원 | 3,388,545 | 0.66% | 402,536 |
| 상위 0.05-0.01% | 7,572 | 4억9천만 원 이상 | 7,205,804 | 1.40% | 951,638 |
| 상위 0.01% | 1,868 | 10억원 이상 | 3,505,069 | 0.68% | 1,876,375 |
| 합계 | 16,187,647 | | 513,547,581 | 100.00% | |

출처 : 윤호중 의원실 보도자료, 2015년 9월 9일.

이 자료를 보면 1천618만7647명의 근로소득자들 중 가장 돈을 잘 버는 최상위 1%, 즉 최소한 연봉 1억3천5백만원(근로소득세 납세 전 소득) 이상을 받은 17만8830명이 전체 근로소득 513조5476억 원의 7.67%인 39조3791억 원을 벌어들였다. 따라서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2천20만원인데, 이것은 최상위 1% 근로소득자들이 평균적인 근로소득자들(연봉 3천172만5천원)보다 7.67배를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역시 심한 소득 불평등인데, 하지만 재산소득의 불평등에 비해서는 정도가 덜하다. 또한 최소한 연봉 6천70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소득자 상위 10%인 169만6천214명은 전체 근로소득 513조5476억 원의 32.04%를 벌어들였는데 이것은 근로소득자 상위 10%(10분위)가 평균적인 근로자의 3.2배(연봉 1억116만7천원)를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종합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최상위 1% 소득 집중

| 구분 | 종합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 | | | | 근로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 | | | |
|-----|----------------------|-----------------|--------------|--------|-----------------|----------------------|--------------|------------|---------|-----------------|
| | 인원 (명) | 종합소득금액 (백만원) | 총종합소득 대비% | 누적% | 1인당 금액 (백만원) | 인원 (명) | 총급여 (백만원) | 총급여 대비% | 누적% | 1인당 금액 (백만원) |
| 합계 | 4,352,929 | 126,023,230 | 100% | 100% | 28.95 | 10,612,293 | 422,371,491 | 100.00% | 100.00% | 39.80 |
| 1% | 43,529 | 28,854,822 | 22.90% | 22.90% | 662.89 | 106,122 | 27,078,652 | 6.41% | 6.41% | 255.17 |
| 2% | 43,529 | 8,884,146 | 7.05% | 29.95% | 204.10 | 106,123 | 13,687,280 | 3.24% | 9.65% | 128.98 |
| 3% | 43,529 | 6,351,336 | 5.04% | 34.99% | 145.91 | 106,123 | 11,943,604 | 2.83% | 12.48% | 112.54 |
| 4% | 43,529 | 5,114,596 | 4.06% | 39.05% | 117.50 | 106,123 | 10,947,279 | 2.59% | 15.07% | 103.16 |
| 5% | 43,529 | 4,383,573 | 3.48% | 42.53% | 100.70 | 106,123 | 10,215,601 | 2.42% | 17.49% | 96.26 |
| 6% | 43,529 | 3,887,932 | 3.09% | 45.61% | 89.32 | 106,123 | 9,619,628 | 2.28% | 19.77% | 90.65 |
| 7% | 43,529 | 3,510,592 | 2.79% | 48.40% | 80.65 | 106,123 | 9,097,022 | 2.15% | 21.92% | 85.72 |
| 8% | 43,529 | 3,201,548 | 2.54% | 50.94% | 73.55 | 106,123 | 8,660,385 | 2.05% | 23.97% | 81.61 |
| 9% | 43,529 | 2,948,430 | 2.34% | 53.28% | 67.73 | 106,123 | 8,294,132 | 1.96% | 25.94% | 78.16 |
| 10% | 43,529 | 2,735,046 | 2.17% | 55.45% | 62.83 | 106,123 | 7,986,577 | 1.89% | 27.83% | 75.26 |

| 구분 | 배당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 | | | | 이자소득 100분위(2012년 귀속) | | | | |
|-----|----------------------|---------------|-------------|---------|-----------------|----------------------|------------|-------------|---------|-----------------|
| | 소득자 (명) | 소득금액 (백만원) | 전체금액 대비% | 누적% | 1인당 금액 (백만원) | 소득자 | 소득금액 | 전체금액 대비% | 누적% | 1인당 금액 (백만원) |
| 합계 | 8,825,442 | 11,328,761 | 100.00% | 100.00% | 1.28 | 47,858,412 | 24,897,085 | 100.00% | 100.00% | 0.52 |
| 1% | 88,254 | 8,172,039 | 72.14% | 72.14% | 92.60 | 478,584 | 11,141,859 | 44.75% | 44.75% | 23.28 |
| 2% | 88,254 | 814,845 | 7.19% | 79.33% | 9.23 | 478,584 | 3,426,003 | 13.76% | 58.51% | 7.16 |
| 3% | 88,255 | 447,006 | 3.95% | 83.27% | 5.06 | 478,584 | 2,137,601 | 8.59% | 67.10% | 4.47 |
| 4% | 88,254 | 301,528 | 2.66% | 85.94% | 3.42 | 478,584 | 1,518,593 | 6.10% | 73.20% | 3.17 |
| 5% | 88,255 | 225,871 | 1.99% | 87.93% | 2.56 | 478,584 | 1,156,099 | 4.64% | 77.84% | 2.42 |
| 6% | 88,254 | 178,032 | 1.57% | 89.50% | 2.02 | 478,584 | 917,820 | 3.69% | 81.53% | 1.92 |
| 7% | 88,254 | 144,293 | 1.27% | 90.77% | 1.63 | 478,584 | 738,559 | 2.97% | 84.49% | 1.54 |
| 8% | 88,255 | 119,517 | 1.05% | 91.83% | 1.35 | 478,584 | 610,025 | 2.45% | 86.94% | 1.27 |
| 9% | 88,254 | 100,696 | 0.89% | 92.72% | 1.14 | 478,585 | 502,898 | 2.02% | 88.96% | 1.05 |
| 10% | 88,255 | 85,932 | 0.76% | 93.48% | 0.97 | 478,584 | 420,526 | 1.69% | 90.65% | 0.88 |

출처 :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4년 9월9일.

가장 부유한 최상위 1%에 기하급수적으로 집중되는 소득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돈 잘 버는 상위 10% 구간 내에서의 차이도 매우 심하며 유별나게 가장 부유한 1%로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상위 10% 범주 내에서 소득이 꾸준히 높아지는데 하지만 가장 부유한 최상위 1% 구간에서는 그것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 범주에서 관찰된다.



2012년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각 범주별로 100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누어 정리한 최재성 의원실의 자료를 보자.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구간 내에서 매 1% 씩 소득 분위가 높아질 때마다 연 근로소득이 19%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하지만 최상위 1%의 경우 갑자기 거의 2배로 증가한다. 즉 근로소득 상위 2%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소득이 1억2천898억 원인데 반해 상위 1%의 그것은 2억5천517억 원으로 98%나 증가한다. 종합소득의 경우 그것은 더욱 심해서, 종합소득 소득분위 상위 2%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이 2억410만원인데 반해 최상위 1%의 그것은 6억6천289억 원으로 갑자기 3배 이상으로, 즉 225%나 증가한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자소득이 많을수록 꾸준히 늘어나던 1인당 연간 이자소득은 상위 2%에서 상위 1%로 높아질 때 갑자기 연 716만원에서 2천228만 원으로 3배 이상, 즉 225% 늘어난다. 가장 심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식배당소득이어서,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꾸준히 늘어나던 1인당 배당소득이 상위 2%에서 상위 1%로 높아질 때 갑자기 연 923만원에서 9천260만원으로 거의 10배로 증가한다.

이처럼 모든 소득 유형에서 가장 부유한 1%와 그 다음의 2% 사이에 상당한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나라 경제에 하나의 특권적인 1%의 소득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넉넉하게 사는 상위 10% 내에서도 가장 잘사는 1%의 갑부들과 그렇지 못한 9% 사이에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격차와 장벽이 존재한다.

근로소득자들 내에서 상위 10%, 최상위 1%로의 소득 집중

앞서 근로소득의 경우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상위 1%로의 소득 집중이 약하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근로소득(실질임금) 증가율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근로소득자들 사이에서 실질 임금이 매년 상승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은 상대적으로 동반성장이 달성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돈 잘 버는 상위 10% 근로소득자들과 그보다 높은 최상위 1%, 그리고 최상위 0.1%의 근로소득 증가율 역시 근로소득 전체의 증가율과 비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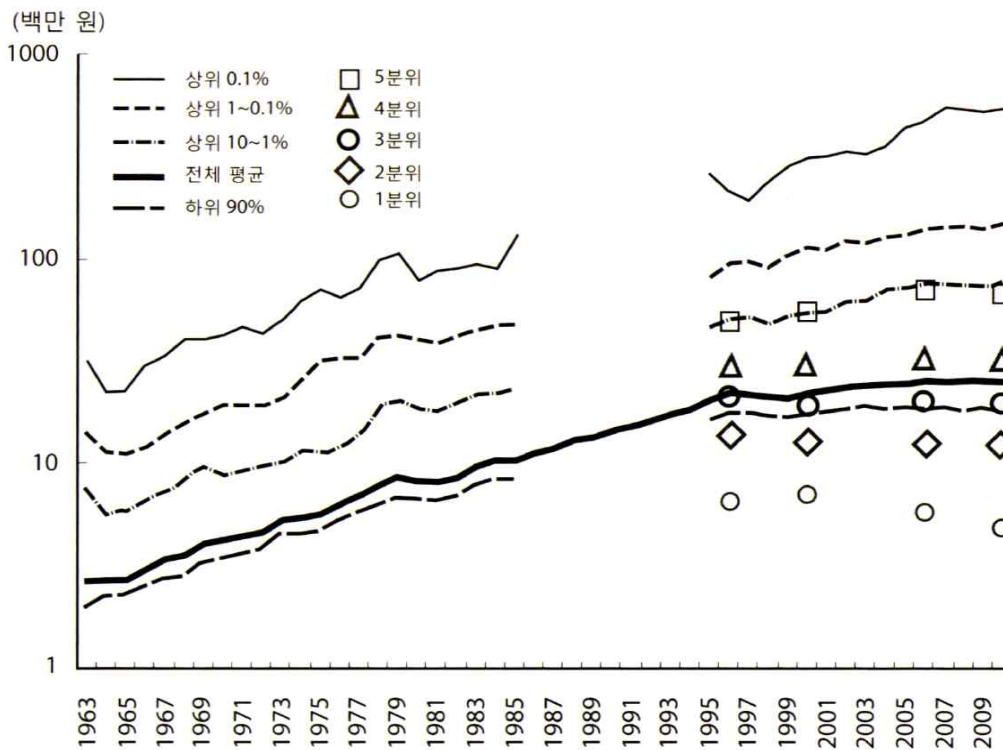
그런데 김낙년 교수가 작성한 그림 8에 나타나듯이,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총근로소득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둔화되었다.



미미한 증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 상위 근로소득자와 하위 근로소득자 간에 실질임금 증가율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가장 돈을 못 버는 1분위(하위 20%)의 경우 1999~2010년의 기간에 실질임금이 증가는커녕 오히려 상당폭으로 하락하였다. 2분위(하위 20~40%)의 경우에도 실질임금이 약간 하락했다. 3분위(중간의 40~60%) 근로소득자들 역시 이 기간 중에 실질임금이 미미하지만 하락했다. 이렇듯 1~3분위 즉 전체 근로소득자의 60%에서 실질임금이 이 기간 중에 줄어들었다. 그리고 감소폭은 하위 소득자일수록 더 컸다. 4분위(상위 40~20%)의 경우 이 기간 중에 실질임금이 사실상 정체였다. 10년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림 8. 소득 그룹별 1인당 근로소득(2000년 불변가격) 추이



자료: 김낙년,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이영훈 엮음,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 246-293쪽.

유일하게 1999-2010년 기간 중에 실질임금이 늘어난 것은 근로소득 5분위 즉 상위 0~20% 뿐이다. 5분위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은 이 기간 중에 상당 폭으로 증가했으



며 더구나 유일하게 총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것은 과거였다면 하위 1~3분위 즉 근로소득자의 60%의 몫이었어야 할 근로소득의 일부가 지난 1998년 이후부터는 가장 잘 버는 5분위의 몫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분배에서 극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상위 20% 역시 그 내부를 더욱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더욱 세분화하여 상위 10~20%와 그리고 상위 1~10%, 0.1~1%, 그리고 0.1% 미만 이라는 4개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상위 10~2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총근로소득의 증가율과 거의 같다. 즉 실질임금이 별로 늘지 않은 것이다. 그들에 비한다면 근로소득 상위 1~10%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약간 더 높다. 가장 큰 변화는 최상위 0.1% 구간에서 발생하는데, 0.1%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증가율은 0.1~1%의 그것보다 확연하게 높다. 다시 말해서, 1998년 이후의 기간에 근로소득 최상위 0.1%의 경우 0.1~1%와 1~10% 범주의 근로소득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그나마 1998년 이후 그나마 총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속도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근로소득 상위 10%의 내부에서도 최상위 0.1% 근로소득자들로의 소득 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 대 90% 근로소득자들 간의 대결이나, 최상위 1% vs 99%간의 대결이나

새누리당과 현 집권 엘리트층은 이들 최상위 1%의 부자들과 혼맥과 혈연, 학연 등 각종 인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까닭에 그 1%의 특권적 귀족 계급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집권자들이 펼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90% 서민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그래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의 1%인 최상위 1% 백만장자들에게는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재산소득(즉 자산소득 또는 금융소득)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야권 인사들은 경제 불평등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경제관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은 상위 20%의 근로소득과 그렇지 못한 80%간의 근로소득 격차가 모든 불평등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근로소득 격차가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야기한 주범으로 재벌 대기업과 노동조합 정규직을 지목한다. 그들은 근로소득 격차는 결국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인해 발생하며 그것은 다시 한국 경제가 아직 중상주의적 재벌체제 즉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엉뚱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 심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가장 부유한 최상위 1%에게로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다수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20% 내에서도 그 하위 그룹인 10~20%의 소득증가는 평균적인 근로소득 증가율에서 정체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야권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제반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 가장 부유한 1%의 고액자산가들과 연소득 수억이 넘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와 고 근로소득 상위 20%에 주목하는 것이다. 야권 경제학자들의 사고 프레임은 한편으로는 ‘부자 되세요’ 재테크 현상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산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간과하게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사회 양극화의 여러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하게 만든다. ✎

※ 새사연은 회원 여러분의 기고 및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원고를 신고자 하시는 분은 edu@saesayon.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참고문헌

-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한국 부자보고서』, 각 년도.
김낙년(2014), 한국의 소득분배: 장기추이와 국제비교, 이영훈 엮음,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 246-293쪽.
장하성(2014), 『한국 자본주의: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헤이북스.
장하성(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헤이북스.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4월 29일 현재

| 아젠다 | 발간일 | 제목 | 작성자 |
|-----------|------|---|--------------|
| 고용,노동 | 1/7 |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 송민정 |
| 고용,노동 | 1/12 |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 새사연 노동경제팀 |
| 주거 | 1/15 |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 권순형 |
| 정치 | 1/18 |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 손우정 |
| 농업 | 1/25 |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 장경호 |
| 주거 | 1/29 |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 강세진 |
| 복지 | 2/1 |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 최정은 |
| 고용,노동 | 2/5 |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 송민정 |
| 미디어 | 2/12 | '사이비' 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 김시연 |
| 잇:북 | 2/18 | 2016 전망보고서 | 새사연 미디어센터 |
| 주거 | 2/25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강세진 |
| 복지 | 3/14 |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 최정은 |
| 주거 | 3/18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 황서연, 진남영 |
| 주거 | 4/4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 황서연, 진남영 |
| 사회적 경제 | 4/11 |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 강세진 |
| 주거 | 4/15 |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 권순형 |
| 청년 | 4/18 |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 송민정 |
| 주거 | 4/22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 황서연, 진남영 |
| 경제 | 4/29 |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 정승일 |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